

#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언

## Online Series

2018. 05. 03. | CO 18-15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쟁의 상처와 갈등으로 점철된 DMZ는 이제 생태평화의 융합,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DMZ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평화벨트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역사적인 기억의 장소로 만드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DMZ 인근 남북접경지역에 친환경 성격을 가미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DMZ의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방대한 규모의 접경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 등 접경지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DMZ의 패러독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DMZ는 한국전쟁의 산물로 남북 양측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2km씩 폭 4km의 안전지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DMZ는 그 이름과 달리 비무장화된 지역이 아니다. 1953년 군사정전위원회 합의문 자체가 DMZ 내에서 완전 비무장이 아닌 자동화기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의 소총과 권총의 무장을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DMZ 내에는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2백여 개의 남북 GP가 구축되어 있으며, 무장병력이 24시간 대치하고 있다.

DMZ는 1953년 이래 분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남북한 간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한 지역이다. 불과 반년전인 지난해 11월만 해도 평화의 집 인근에서는 북한군 병사의 탈북과정에서 북한경비병들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사건도 DMZ에서 발생했으며, 2005년 12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연천의 530GP 사건도 결국 DMZ의 극단적 긴장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구촌 차원에서의 냉전체제는 해소되었지만 DMZ는 아직도 민족분단과 갈등을 상징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DMZ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은 안보관광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이 기이한 장면을 보기 위해 DMZ 일원을 찾는 현실이다.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DMZ는 역설적으로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DMZ는 일반적인 생태계와는 다르다. 1990년까지만 해도 DMZ에서는 안보목적으로 잡목을 불태우는 주기적인 화공작전이 펼쳐졌으며, 일부지역은 군사적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원시적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지역은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다. DMZ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뢰가 매설되어 인간과 동물들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류 및 어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철책을 넘지 못한다. DMZ의 생태계는 폭 4km에 길이 248km의 고립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DMZ생태계는 스스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복원되었지만 그 자체가 남북한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역설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DMZ와 접경지역은 분단체제의 비정상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DMZ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와 안보상의 이유로 경제발전과 개발의 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어 왔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이 철원까지 가는 것 보다 빠르고 쉬운 현실이다.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따라 대규모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 이남의 모습과 반대로 북쪽지역은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쪽 끝은 DMZ로 가로막혀 있고, 남북의 청년들이 청춘의 꿈을 유보한 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

DMZ는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간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DMZ는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둘로 나누고, 태평양을 건너 부산항에서 도착한 컨테이너들은 더 이상 대륙으로 갈 수 없다. 한반도는 5000년간 대륙권이었지만 광복 이후 섬으로 전락했으며, 오로지 해양에 의지해 발전을 추구해야 했다. 대륙의 일부이면서도 그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DMZ에 기인한다.

## DMZ를 DMZ로

관문점선언은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와 아울러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완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시행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이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비통제와 관계정상화가 완료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는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DMZ의 경우 남북한 간에 즉각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DMZ를 그 이름대로 비무장화하는 것이다. DMZ의 중무장화는 군사적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며, 사소한 사건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DMZ의 비무장화는 중무장의 철거, GP의 단계적 축소 및 완전 철거 등 단계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DMZ의 비무장화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 양측에 모두 유익한 것이다. DMZ가 완전히 비무장화될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는 현저하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작이다.

## DMZ를 생태·평화협력의 아이콘으로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DMZ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분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정점은 도보다리에서 진행된 남북한 정상 간의 단독 산책대화였다. DMZ의 고요 속 두 정상의 대화는 상처받은 자연의 회복력과 남북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DMZ가 생태·평화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DMZ의 생태·평화적 브랜드가치는 천문학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쟁의 상처와 갈등으로 점철된 DMZ는 이제 생태·평화의 융합,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DMZ가 완전한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재탄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세계생태·평화의 아이콘이자 새로운 한국적 생태·평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MZ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평화벨트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역사적인 기억의

장소로 만드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뤼네스반트는 영어로 그린벨트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을 가로질렀던 경계선 상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감시타워와 초소 등을 기념물로 유지함으로써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그뤼네스반트는 독일통일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특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의 경우 동서해상을 포함해 DMZ 전역에 포괄적인 생태공원의 개념을 적용하고, 평화문화를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MZ 생태원,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DMZ 평화공원과 세계평화포럼, 그리고 관련 UN기구의 유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평화지대로 재탄생한 DMZ는 세계적인 생태·평화문화와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DMZ는 남북한을 연계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남북 생태·평화협력의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벨트가 한반도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에 포함된 이유이다.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유역 공동관리는 시급한 현안이며, DMZ를 매개로 다양한 남북한 간 생태·환경 협력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강설악권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과 연계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유익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DMZ 인근 남북접경지역에 친환경 성격을 가미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어족자원을 평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DMZ는 남북한을 잇는 생태·평화의 혈맥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DMZ 접경지역을 친환경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은 장기간 개발소외지대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감당해야 했다. DMZ 전반의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친환경 개념을 적용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DMZ의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방대한 규모의 접경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 등 접경지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DMZ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대륙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DMZ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대회랑'(Great Corridor)으로 변모할 경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으며, 물류시간 및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중국 동북 3성 개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 그리고 남북경협이

연계되면 남북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경제의 허브로 재탄생 할 것이며, 제 2의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은 꿈이 아닐 것이다. DMZ의 로망이다.

중요한 것은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모든 과정은 국민적 축제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분단체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찻김굿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지대로 재탄생한 DMZ는 한국 평화문화의 산실이자 남북한 간 신뢰와 번영의 싹을 틔우는 공간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